

# 박지원 “대화록 문제 박 대통령이 풀어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비공개 열람이 최선



박지원 “그 자체도 좀 성급했고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4일 국정정보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공개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전원칙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좋다”며 “(박 대통령에)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으려고 대화록을 불법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한 후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인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장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화록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파장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같은 당 문제의 의원이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관련 자료를 전면공개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문 의원의 순수성을 믿고 싶다.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 굴욕외교를 했다고 하니 사실 확인을 하자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그 자체도 좀 성급했고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상회담 회의록 제출 요구서’의 국회 표결 당시 민주당의 ‘강제적 당론’을 깨고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또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이 보관 중인 음성파일 공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부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 청와대가 보관하고 있는 녹음파일을 벌써 ‘마사지’ (변조)했다는 것(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청와대에서는 (대화록) 전문 공개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직무유기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 천정배 “민주·안철수 합쳐 신당 만들어야”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의 정체성과 관련해 “새 정당은 단지 양대세력을 합쳐 놓는 정당이지 아니다. 계파나 정파들의 지분을 나누는

민주당 천정배 전 의원은 4일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힘을 합쳐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의원은 이날 광주 동구 학동 새정치경제아카데미 사무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각각 후보를 내면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힘을 합쳐 개혁 정치세력이 모두 모이는 개혁적 국민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천 전 의원은 창당 시기와 관련해 “이를수록 좋다”며 “10월 재보선 전에 안 되면 우선 양대세력이 선거연합이라도 성사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창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당이 아닌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분명히 밝히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의원은 또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천권과 당직선거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한편 문호를 전면 개방해 참신하고 유능한 새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vs “깜깜이 선거 우려”

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현실화되나

팽팽한 찬반 의견속 국회 문턱 넘는데 관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내 정치 관련 특별기구가 4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쇄신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들의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국민 70%가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방정치의 중앙 예측화나 지역 구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권 제한, ‘돈

공천’ 등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권 유지로 인해 생기는 폐단이 많아져 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대부분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제시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출세우기 폐해를 극복하고, 불공정이나 ‘돈 공천’ 등의 부정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 경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가 돼 오히려 정치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정치 신인의 등장이 사실상 막히는 동시에 지방 유지나 토호 세력이 자금

양의 정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배출되는 셈이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vs “깜깜이 선거” 팽팽=찬성론자들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 중심의 출세우기 폐해를 극복하고, 불공정이나 ‘돈 공천’ 등의 부정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 경력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가 돼 오히려 정치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정치 신인의 등장이 사실상 막히는 동시에 지방 유지나 토호 세력이 자금

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선거를 흔탁하게 하고,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여성, 장애인 단체에서는 공천에서 이들에 대한 ‘강제적 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가 강하다. 이밖에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정당 정치’를 인정하지 않아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기득권과도 연관=대체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구청장, 시장, 시·군·구 의원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지방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크다.

국회의원들은 기껏해야 일주일에 1~2차례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들은 ‘주민 밀착형’ 행정을 구실로 사실상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가장 두려운 잠재적 경쟁자인 셈이다.

◇9월 정기국회서 평가를=법제화 여부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이면 이미 선거전이 뜨겁게 벌어지면서 ‘게임의 룰’을 더욱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사안인 만큼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적잖은 의원이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정원 규탄 시국회의 발족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각 제 정당과 시민사회·종교·학계·여성·대학생단체 등 4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회의’ 발족식을 갖고 국정원 개혁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野 의원 141명 7월국회 소집 요구...與 ‘보이콧’

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새누리당이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생법안 추가 처리 등을 이유로 오는 8일부터 내달 2일까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안철수·박주선·송호창 의원 등 모두 14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표인은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

해 남양유업방지방과 같은 갑을관계 바로잡기 등 6월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7월 ‘민생보충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소집요구에 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곧바로 “민생과 동떨어진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며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강은희 원내대표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폐회 중에 상임위는 얼마든지 열 수 있다. 국회는 상시

로 열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표인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정점 법안은 먼저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상임위별로 현장을 방문해 ‘손뼉 밀 가시’를 없애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창조경제 진흥 상황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경제 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4분

의 1(75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 수는 127명으로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임시국회는 자동 개최되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개천 휴업’ 상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활동과 현재 가동 중인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은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박지경기자jpark@kwangju.co.kr

# 천호선 진보정의의 당대표 후보

“넓은 진보 과감히 버리고 광주정신 더 꽃피우겠다”



진보정의당 천호선 당 대표 후보는 4일 “비전과 방식, 문화의 대혁신을 통해 진보정의당을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탈바꿈해 광주정신을 지키고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정치의 가치와 성과를 지키고 계승하되 넓은 과거와는 과감히 결별하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후보는 “단 한 번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도, 노력도 해 본 적이 없던 이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해 광주를 모독하고 있다”며 “진보정의당이 당직 선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광주를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고한 5·18 정신을 지키고 더 꽃피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4일 광주를 시작으로 당 대표 및 부대표 등 대표단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당직선거에 돌입했다. 당 대표 후보에는 천호선 후보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 부대표 후보에는 기호 1번 김명탁·기호 2번 이정미·기호 3번 김형탁·기호 4번 김명기·기호 5번 문정은 후보 등이 나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2013년 10월 1일 OPEN

파격적인 임대료가!

-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 지상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 지상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 지상1층 롯데리아,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 지상2층 PC방 203평×200만원= 4억600만원
-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 지상2층 볼링장 854평×150만원 12억8100만원
- 지상2층 한정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 지상2층~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 지상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 지상3층~4층 영화관(입점확정)
-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